

**Diversitas**



**Diversitas**

7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07

##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서명원 가톨릭 예수회 신부, 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35

##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전대원 우례한빛고등학교 교사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관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 서명원

가톨릭 예수회 신부, 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

필자가 자주 들을 수 있으며 늘 흥미롭게 다가오는 한국어 표현 중 하나는 ‘원판불변법칙’이다. 말할 나위 없이 이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누군가의 굳어 있고 좁은 사고방식과 거기에 따른 행동과 행위를 비판할 때, “이 놈이야말로, 죽어 봤자 추호도 좋아지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정(斷定)의 말이기 때문이다. 이 줄고에서는 종교적 기본 사고방식, 즉 자기의 고유한 종교적 원판(原版, one’s original religious formatting)의 불변성과 가변성의 여부에 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현대의 종교학의 창립자인 막스 뮐러(Max Müller, 1832-1900)의 명언에 따르면, “[종교를] 하나만 알면 그 하나도 모른다.”<sup>1)</sup> 이 말씀이 일깨워주려고 하는 이치대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의 종교적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한다면, 일단 인류의 종교적 다양성을 최소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다

---

1) “He who knows one [religion], knows none.”

양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인생에 관한 기본적 자세를 취해야만 하겠다. 종교란 알게 모르게 인간의 삶의 모든 차원들에 두루두루 침투하기 때문에, 풍요롭고 알차게 사람답게 살려면, 자신의 고유한 종교적 정체성을 가능한 한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면에 누군가의 종교적 원판이 배타적이거나 폐쇄적이라서 굳어버린 성질의 것이라면, 삶의 체험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이웃 종교들과 좋은 열매를 맺는 교류를 할 줄 모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판이 심각한 종교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알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다.

종교의 개념을 단순히 설정하자면, “마루(宗)에 관한 가르침(敎)”이다. ‘마루’란 널빤지로 만든 집의 바닥도, 등성을이 이룬 지붕이나 산 따위의 꼭대기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해석해 볼 때에,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거나 제일 높은 것으로 생각해서, 최고로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이치를 의미하는 낱말로 아주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종교란 존재의 이유를 찾아내는 데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가르침이다.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돈이 누군가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라면, 돈이 바로 그 사람 삶의 ‘마루’가 된다.

동서남북에 걸쳐 대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지구촌에 현존하는 종교적 전통이 4,3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만큼 많은 전통들이 ‘마

루'에 관해서 제공해 주는 가르침이 많다. 응당 각각 '마루'를 명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들, 즉 공(空), 도(道), 범(梵), 불(佛), 신(神), 리(理) 천(天), 알라(Allah), 중도(中道),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허(虛) 등 무어라고 하든지 간에 그 이름들이 부지기수다. 유대교에서는 궁극적인 존재의 초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낱말 중 하나인 YHWH를 외우는 것을 신을 모독하는 죄로 다할 수 있는 데까지 엄격하게 단죄한다. 따라서 그러한 죄를 안 짓기 위하여, 그 이름을 “나의 주님(아도나이, Adonai)”으로 읽는다거나, YHWH를 이루는 네 개 자음의 이름만을 하나씩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외운다.

이 줄고에서는 누군가의 종교적 원관이 본래 굳어 있어서 별로 개방적이지 못할지라도, 알맞은 조건 하에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러한 완고한 원관이 180도 돌아서서 활짝 열린 방향으로 한없이 진화할 수 있다는 희망찬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환언하자면 종교적 사고방식이란 반드시 원관불변법칙의 지배 아래 있어야만 되는 성질의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질적으로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되는 무한한 가변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종교적 다양성이란 주제가 방대한 것만큼 지나치게 추상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글의 1부에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필자의 종교적

체험에 관하여, 2부에서는 요즘 지구촌에서 종교 간의 알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에 대해서, 3부에서는 인류의 종교적 다양성에 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종교적 우물 안의 개구리(坐井觀天)

필자는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으로서 1953년 말에 태어났다. 우연의 일치인지 한반도에서 6·25의 골육상쟁이 끝났던 바로 그 해와 똑같은 때다. 종교는 소위 모태신앙으로서 그 당시의 대다수 불어권 캐나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천주교였다.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 신자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시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자(仁慈)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님으로써 천주교 말고는 구원의 길이 별로 없다고 배웠으며, 의심할 여지없이 그 사실을 굳건히 믿었다.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생각조차 못 했다. 그 당시에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들 중에 성당에 꾸준히 안 다니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기가 어려웠으며, 만일 안 다녔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지탄을 면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했다.

한편 고향인 몬트리올에 양친의 댁이 자리잡은 동네에는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 말고도 영국계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다수가 성공회(Anglican Church)에 속한 신도들이었다. 그들 중에 친한 친구가 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좋고 고귀한 인간일지언정, 구원을 받으려면 조만간 당연히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만 할 거라

고 아주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설득해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었다. 그냥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길가에서 마주친 모르는 영어권 캐나다 사람들과 말다툼만이 아니라 신체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싸움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살만하고 충분히 조화로운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정하기 부끄럽지만, 퀘벡주에 사는 원주민 11여 개 부족의 존재와<sup>2)</sup> 그들의 기가 막힐 정도로 다양한 언어, 문화, 그리고 종교에 관해 필자의 인식 수준은 지극히 낮았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참 후에야, 어렸을 적에 배운 것과는 달리 그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수준이 높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우리 현대문명과 달리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사실에 제 눈이 뜨였다.

또한 그 당시에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유대교와 이슬람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유대인들에 관한 지식은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흥정하는데 아무도 못 따라갈 정도로 뛰어나서 돈을 아주 잘 번다.”는 것과

2) 원주민은 퀘벡주에는 10만 5천명 정도, 캐나다에는 15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비슷한 고정관념이었다. 중학교 지리 수업 시간에 이슬람교에 관하여 배운 바로는 “마호메트라는 종교광이 가짜 계시를 얻고 회교라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했다.”는 정도일 뿐이었다. 애니미즘이나, 무속이나, 인도나 중국의 종교들에 관한 교육이야말로 하나도 없었다.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 받은 종교 교육의 폭이 비좁은 것만큼 수준이 낮았다.

사실상 퀘벡주와 캐나다에서 사는 유대인들은<sup>3)</sup>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는 유대인들처럼 소수이면서도 오래전부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강한 정치경제적 세력을 이루고 있다. 이슬람의 신봉자들은 소수이지만<sup>4)</sup> 2017년 1월 29일에 퀘벡시에 있는 대 모스크에서 터졌던 테러 사건 후부터, 무슬림의 존재나 그들이 전 세계의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과소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

필자가 사춘기를 보내는 동안에 국내외에서 일련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베트남 전쟁, 히피 운동, 바티칸 제2 공의회, 프랑스의 1968년 5월 학생혁명[May 68 Student Revolution], 퀘벡주의 소위 조용한 혁명[The Quiet

---

3) 퀘벡주에는 9만명 정도, 캐나다에는 7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4) 퀘벡주에는 30만명 정도, 캐나다에는 100만명 정도가 살고 있다.

Revolution]과 독립운동의 시작 등), 신기하게도 어렸을 때 형성된 필자의 단순한 종교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으로 말미암아 생긴 종교적 사고방식의 복원력(resilience)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는 19살이 되었을 때, 즉 1973년 의대에 다니기 위해서 프랑스에 유학갔다. 그러다가 1979년에 예수회(Jesuit Order)라는 가톨릭 남자 수도회의 프랑스 관구(管區)에 입회(入會)해서 수도생활을 시작했다. 프랑스는 캐나다 퀘벡주와 마찬가지로 천주교 신자가 많은 반면에 개신교 신자는 소수였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서 로제 수사님(Roger Schutz, 1915-2005)이 창립하신 떼제(Taizé) 공동체가 고차원적 교회 일치 운동을 활발하게 하며 프랑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공동체와 영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달리 각각 사회당과 공산당 소속인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중에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가 상당히 많았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지금에 비하면 조용하게 사는 무슬림이 더러 있었다. 2020년의 통계로 미루어서 프랑스 인구의 10%, 즉 670만 명 정도가 이슬람교도임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모스크 수는 대소 시설을 다 포함해서 2,500여 군데가 된다. 그런데 그 무슬림들은 결코 이구동성

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수적인 경향도, 진보적인 경향도, 그리고 그 양극단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경향들도 아주 다양하게 보인다. 요즘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의 국가 헌법이 백 년 넘게 주창해 온 세속적 문화(secular culture)와 이슬람교의 보수적인 세력들이 여러 방향으로(때론 폭력적으로까지) 복잡하게 부딪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프랑스에서 오래전부터 이슬람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sup>5)</sup>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무슬림에 비하여 소수이지만,<sup>6)</sup>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모든 차원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다양한 종파들로 나뉘어 있다. 그중에 가장 진보적인 종파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역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필자가 프랑스에서 예수회에 입회한 후 수련기를 마치고 연학 과정을 밟고 있던 1983년에 예수회 한국 관구의 책임 담당자가, 예수회 프랑스 관구의 관구장에게 “우리는 일손이 많이 모자란다. 젊은 사람 몇 명을 한국으로 좀 파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편지로 보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

5) 1987년에 미테랑 대통령(François Mitterand, 1916-1996)이 파리에서 Institut du Monde Arabe를 개관했다.

6) 약 70만 명

서 필자가 한국으로 선교사로서 파견되었다. 서울에 와서 첫 3년 동안 연세대학교의 한국어학당에서 심혈을 기울이면서 한국말을 공부했다. 그동안에 배달민족의 종교계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1988년에 충분한 실습을 포함하여 종교 관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부의 맥을 다할 수 있는 데까지 폭넓게 잡았다. 한국은 북미와 서유럽과 달리 글자 그대로 다종교 문화권(multi-faith cultural area)이다. 한반도 역사의 흐름을 따르면,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인 무속, 불교, 유교, 그리고 때때로 그리스도교가 하나씩 차례대로 반도의 역사적 무대에 올라와서 출연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요소들이, 지각을 이루는 수많은 지질학적 계층이 지나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겹쳐져 왔듯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쌓이고 쌓여서 역동적이며 복합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사고방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누군가가 필자에게 한반도의 종교사를 바라볼 때에 유념할 만한 특징 하나만을 알려 달라고 청한다면, 한국인들은 자주 서로 이견이 없는 듯이 ‘우리’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볼 때에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한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대답하겠다.

소우주 같은 한국 종교계의 범위가 하도 방대하여서, 미로 안에 들어가서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느낌이 될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지나친 욕심에 반드

시 망한다.”는 과욕필망(過慾必亡)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은 동시에, 선배로부터 “우물을 파도 하나를 파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정신을 더욱더 차렸다. 그래서 비교적 가슴에 더 깊이 와 닿는 한국 불교를 전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1995년에 한국의 20세기 불교를 잘 대표하는 성철(性徹, 1912-1993)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또한 1996년 (사)한국선도회(韓國禪道會)에 가입해서 오늘까지 간화선(看話禪) 수행을 한결같이 해 왔다. 2004년 봄에 파리 Denis Diderot 대학의 한국문학과에 제출한 박사 논문에 대한 심사를 받고,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한지 몇 개월 후에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필자는 무슨 인연 때문에 다종교의 문화권인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여전히 전혀 모른다.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살면서 서서히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의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원판에, 지대한 흔들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문화적, 종교적 차원에서 깊고 깊은 정체성 위기에 빠져버렸다. 바닥을 치고 그 위기의 늪에서 서서히 헤어나서,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내는 데에 20년이나 걸렸다. 이어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수많은 단계들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하기보다는, 그 과정 끝에 지금 인류의 종교사가 보여주는 기가 막힌 종교적 다양성에 관한, 필자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거두절미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 지구촌에서 종교 간 알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

인간의 종교 전통이 다양한 것만큼 세계 도처에서 종교적 알력 관계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이 무척 많다. 요즘 국제 뉴스를 잠시만 들어도 그러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언급할 만한 지역이나 국가로서, 아프리카 혼(horn)의 에티오피아, 인도 북쪽의 캐시미어, 중국의 신강성(新疆省),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쉽게 예로 들 수 있다. 중동의 경우, 레바논, 북시나이, 시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외에도, 비교적 모든 차원에서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카타르(Qatar)를 2017년 5월부터 철저히 봉쇄해 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이집트 등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예로 든 갈등 사례들이 모두 순수하게 종교 간 알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사례들이 분명하게 알려 주듯이 종교 전통들이 제기하는 다양하고 고상한 이상(理想)들은 인간계를 이탈해서 공중에 떠있는 양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아쉬우면서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은, 오히려 그 전통들을 각각 대표하는 궁극적 이치들과 종교적 이상들이 높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왜곡되거나 때로 심지어 배반당해서 완전한 추락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다.

모든 종파를 막론하고 현대 한국 인구의 27% 정도가 신봉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예를 들자. 그리스도교의 본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상징인 십자가의 진정(眞正)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떤 폭력이든지 철저하게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적으로 마음먹어야 할뿐더러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폭력을 스스로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다고 의연하게 여기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교 신학의 전통적 관점에서 해명할 때, 나자렛 예수의 소위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계를 자꾸만 생지옥으로 만드는 폭력의 끊임없는 악순환을 부수어 버리는 힘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가 자신이 당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정신이나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이용, 남용, 악용, 오용해서, 예나 지금이나 전쟁까지 일으켜서 인간계를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이렇듯이 자가당착에 쉽게 빠져버릴 수 있다. 예컨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Dalai Lama) 덕택으로 흔히 순수한 평화주의로 알려져 있는 불교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불교의 높은 이상을 팔아먹어서 사바세계가 피바다가 된 경우들을 더러 발견

할 수 있다. 국제연합회의 인권위원회에서 전형적인 대량 학살로 평가 받은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만 봐도,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창립자로 인정받는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ārtha, 기원전 563? ~ 483?)가 평화주의자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결국은 큰 효과는 없었지만, 달라이 라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불자들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에게 그 학살을 즉시 중지시켜서, 피해자들을 무조건 도와주고 범죄자들을 처벌해야만 한다고 거듭 간절히 청한 바 있다.

대저 종교와 정치가 복잡하게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 간 알력은 사회적, 경제적, 국제관계 차원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인간 삶의 모든 차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전이나 전쟁까지 일어났을 때에는 뉴스의 내용이 너무 끔찍해서 보고 듣는 것을 참기 어렵고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나,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일으키는 기후 변화를 통하여 누구나 재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곳은 좋은 싫든 역시 지구촌이란 큰 마을이다. 따라서 타조인양 종교적 다양성과 관련된 우리 지구의 복잡한 현황을 외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용감하게 직시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대응일 것이다.

## 인류의 종교적 다양성에 관한 올바른 자세

아마도 종교적 다양성에 관한 올바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을 “나의 혹은 우리의 종교가 아닌 종교(not my or our religion)”나 혹은 ‘다른 종교(other religions)’로 삼기보다는, 이웃 종교(neighboring religions)로 삼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이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물론 그 이웃 종교들에 관한 최소한의 아량(雅量)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지만 진정한 아량을 보이는 것이 겉으로 쉬운 것 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상 지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종교적 우열을 가리려고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인도를 해방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1869-1948)의 경우, 이웃 종교들에 있어서 한량없는 아량을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독한 극기고행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은 무슬림의 정치적 세력을 대표하는 무하마드 알리 진나(Muhammad Ali Jinnah, 1876-1948)가 통일된 인도에서 힌두인들과 같이 살기를 꺼렸기 때문에, 간디가 꿈을 꾸던 대인도가 둘로 갈라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서로 적대시하는 파키스탄과 인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안타깝지만 종교적 다양성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종교인들의 원

판이 충분히 너그럽지 못하다.

흔히 “우리나라는 다르다. 그러한 문제가 없다. 우리는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한반도에서는 종교 간 알력으로 인해서 큰 갈등이 생기거나 내전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내포하는 이상주의적인 역사관은 어느 정도까지만 현실을 반영해 줄 뿐이다. 실제로 한반도의 역사를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싫겠지만 이와 같은 역사관을 반박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과 경우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인다.

뻔한 예로서 조선시대 내내 철저하게 실시한 억불승유 정책이나, 19세기가톨릭에 대한 끔찍한 일련의 박해를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주체 사상과 그에 해당하는 극단적 공산주의가, 어떤 면에서 지극히 배타적이며 폐쇄적인 종교처럼 기능(機能)하고 있다고 간주한다면, 해방 후에 터진 6·25의 골육상쟁이 종교와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다고는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 6·25이후의 예로서 소위 왜색불교를 나라에서 정화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감리교 소속 이승만(1875-1965)의 정권 하에서 벌어지기 시작하여 60년대 후반기까지 꾸준히 이어진 대처승들과 비구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도 들 수 있다.

현대 한국에 있어서는, 장로교 소망교회 소속인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불교조계종 사이에 템플스테이(temple stay) 프로그램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건을 기억하기만 해도, 개신교와 불교와의 관계를 늘

알력이 없는, 아량이 가득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한국 개신교의 다양한 종파들과 가톨릭이 서유럽에서처럼 교회 일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교회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개신교 신도와 가톨릭 신자가 서로 사랑해도 결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결국은 크게 볼 때에 둘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둘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종파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종파로 개종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만일 불교 신도가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필자는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에서 가르치면서 때때로 학과의 대학원에 입학 시험을 치르러 오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면접을 진행해야 했다. 그들에게 종교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몇 분이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설교할 때마다 스스로 믿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다. 다양한 종교들에 열려 있지 못하는 개신교 신학 말고도, 우리나라의 종교에 관해서도 배우고 싶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런 저의 입장을 못마땅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면접 시험을 보러 여기에 온 것을 알면, 즉시 저를 내보낼 것이다.”

그 목사님들이 마음속으로 깊이 느낀 바 대로, 어느 종교든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이 되지 않는 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서서히 화석화되며,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다. 소위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al circle)이 세 가지 요소인 전통, 맥락, 해석으로 그 끊임없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 즉 어느 종교의 신도들이라도 자기가 의지하고 신봉하는 종교적 전통의 경전들(traditional texts or scriptures)을, 주어진 새로운 역사적 맥락(context) 안에서 알맞게 해석(interpretation)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어느 종교든지 자기의 전통(tradition)에 충실하면서도 변형(transformation)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용이하지만, 이 과정은 사실상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사고를 동시에 동원하는 변증법으로서, 어떻게 자기 종교의 최고 이상(마루)을 실제적으로 현실 안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관하여, 끊임없는 고민을 요구하는 줄 타기와 같다. 우리 지구촌의 현황에서 어느 종교나 생존권을 유지하려면 이웃 종교들과 최소한의 교류를 할 줄을 알아야 한다. 다종교 문화권인 한국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런데 국내외에서 모든 종교들이 예외 없이 상당한 폐쇄성과 배타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예로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의 순서대로 각각을 잘 대표해 주는 인용문들을 보자.

“우리는 안다. 어느 날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영원한 평화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평화를 이룰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기도할 것임을. 그리고 세계적인 형제애(형제의 연대), 세계의 통일과 인류 통일은 거기서 이뤄질 것이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한 벨푸[Balfour, 1848~1930] 선언 100주년”  
<The Messenger: The Magazine of the Liberal Israelite Union of France>, 2017년 12월호 특집 기사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하나님, 하느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6

“알라 밖에는 신이 없다. 마호메트 만이 유일한 알라의 예언자이다  
(La ilaha illa Allah Muhammed asul Allah).”

하루에 다섯 번 하는 기도를 시작할 때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외우는 내용

“하늘 위와 하늘 아래서 오직 나만이 높도다. 세계가 모두 괴로움이므로,  
내가 장차 편안하게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동국역경원에서 번역한 「보살강신품(菩薩降身品)」 중에서

이 모든 인용문의 공통점은 각각 자기 종교의 ‘마루’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극도로 절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여러 원인 중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류의 종교적 다양성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역시 그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면, 자신의 삶에 의미와 존재 이유를 부여해 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가, 상대적인 것으로 변해서, 그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구촌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데 지나치게 절대화된 ‘마루’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그들 사이에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부수어 버리는 위험한 경쟁 및 대립관계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경시할 수 없다.

한편 인류의 종교사를 인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이렇듯이 절대화된 종교들의 모든 ‘마루’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상대적일 뿐이다. 물론 이것은 종교학자의 소위 객관적인 입장과 종교인의 소위 주관적인 입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객관성과 주관성이 대립하는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인문학의 주관성과 종교 체험의 객관성을 각각 과소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러다가는 “종교인의 체험이야말로, 객관성이 완전히 결여된 순수한 주관주의다.”라는 엉뚱한 결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종교인의 고유한 체험이 가지는 상대성과 절대성을, 혹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까?

대저 여러 종교가 으뜸으로 삼는 원칙이나 궁극적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종교적 다원주의(多元主義)라고 하면, 종교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불자들에게 거부반응을 강하게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적 다원주의란 한덩어리로 된 개념(monolithic concept)이 아

님을 모른다. 사실 종교적 다원주의는 다원적 다원주의, 포괄적 다원주의, 일원적 다원주의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셋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다원적 다원주의에 따르면 인류의 종교의 수가 많고 다양한 것만큼 산들도 많다. 그런데 그 산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에, 그 산들을 올라가고 있는 등산객들이 서로를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류의 종교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기가 영원토록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환언하자면 종교 간의 유사성을 못 보고 극단적으로 차이성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포괄적 다원주의에 따르면, 산은 하나밖에 없지만 인류의 종교들은 각각 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다양하고 고유한 오솔길들과 같다. 그런데 산의 꼭대기는 다름아닌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마루'와 같다. 결과적으로 아량이 있어서 이웃 종교들을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포괄'하는 즉 자기 수하에 집어넣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집(我執)을 일으키는 "우리 종교는 최고다." 라는 아상(我相)을 벗어나지 못한다.

일원적 다원주의는 인류의 종교들이 각각 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다양한 오솔길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꼭대기에 아무 '마루'도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꼭대기는 아무도, 아무 종교도 영원토록

언어화하거나 차지할 수 없는 오묘한 언어도단의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많은 오솔길들 중 어떤 것도 산의 마루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오솔길들이 산꼭대기를 향해 있는 한, 그 산꼭대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바꿔 말해서, 산길과 산꼭대기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역설적으로나마 고수하며 강조하는 입장이다.

오로지 이 입장만이 종교적 체험의 절대성과 상대성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동시에 그 체험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모두 살려 준다. 바꿔어 말하자면, 자신이 올라가는 오솔길은 수많은 산길들 가운데서 하나일 뿐임을 확실히 알면서도, 자신이 충실히 따라가는 오솔길로서는 둘도 없는 고유한 산길로 삼는 것이다. 다른 비유로 설명하자면, 자신의 모국어는 다른 언어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유하면서도, 관심만 있으면 배울 수도 있는 인류의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다.

오로지 일원적 다원주의만이 진리에 관한 대화적 접근 방식, 즉 더불어 함께 오묘한 ‘마루’를 향해서 진리를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하는 종교적 생활 방식을 허락한다. 자신이 이웃 종교가 다니는 산길에 대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듯이, 이웃 종교 역시 자신이 다니는 산길에 관한 관심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모든 오솔길들이 언어화 할 수 없는 꼭대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산길들이 “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오솔길들이 전부 다 돌도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상대주의를 대표하는 “이 산길이나 저 산길이나 다 똑같다”는 주장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웃 종교와의 대화”란 19세기에 막스 뮐러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고대에서 인도를 무력으로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아쇼카 대왕(Aśoka, 기원전 304 ~ 232)이 백성을 위해서 나라 도처에 세운 돌기둥이나 큰 바위에 새기게 한 칙령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칙령에서 아쇼카는 백성들에게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쇼카는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신조들이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중요한 점에서는 일치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것이자 일치점들에 쏠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쇼카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많은 것을 배우고 박식하게 되며, 만족스런 방식으로 자신의 종교 체계를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다른 신조들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면 다른 신조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비판을 자제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신조들 속에서 일치의 느낌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sup>7)</sup>

---

7) 『불교의 이해』(케네스 첸, 길희성·윤영해 옮김, 분도출판사, 1994), 140쪽에서 발췌 및 약간 수정

현대 종교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칙령의 내용으로 미루어서 일원적 다원주의자로 여길 수 있는 아쇼카 대왕은, 백성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종교 간 대화를 통해서 종교 간 알력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 깊이 움츠리는 개구리가 멀리 뿔다

필자는 한참 동안 종교적 시야가 좁은 사람, 즉 종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인생의 여정이 허락해 준 일련의 체험들을 통해서, 인류의 종교적 다양성을 서서히 발견하고 폭넓게 받아들임으로써, 그릇이 좀 더 넓고 깊은 종교인이 될 수 있었다. 비유컨대 한참 동안 우물의 바닥에 앉아 있던 개구리가 어느덧 원천적(源泉的)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인류 종교의 다양성에 눈이 뜨여서 마음이 활짝 열린 것만큼, 그전까지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가 “최고다!”라는 입장을 딱 취하느라고 소모되던 상당한 힘이 개방되어서 자유롭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듯이 이웃 종교에 관해 큰 관심을 가지는 필자에게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거나, 필자를 “신부!”라고 부르기도 하는 “스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필자는 아쇼카 대왕이 돌에 새긴 칙령을 통해서 고대 인도 백성에게 가르쳐 준 이웃 종교에 대한 정신을 이어 받은 경계인(frontier person)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혼합주의에 빠진 종교인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종교 간 대화란 자신의 종교적 정조를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엄밀

하게 주창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곳에 박은 종교적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있다. 자기의 모국어를 제대로 알아야 외국어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듯이, 자기의 본래 종교를 웬만큼 알아야 이웃 종교를 건전하게 사귄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불교를 전공한 필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가톨릭 사제다. 뿐만 아니라 불교 말고도 유대교, 이슬람교, 도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들을 사귀으로써 자기 종교적 정체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철저한 예수쟁이”가 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 필자보다 더 열심히 사는 이웃 종교의 신봉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기쁘다. ✠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 전 대 원

위례한빛고등학교 교사

‘다양성’이란 말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자고 하면 이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다양함을 긍정적 함의를 가진 단어로 전제한다면 그 반대에는 획일성이란 말을 떠올릴 수 있다. 획일화된 교육을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지만 교육에서 다양화가 뜻하는 함의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만약에 다양성이 일종의 차별로 받아들여지거나 복잡성의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 함의가 꽤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이 일부 사람들에게 ‘깜깜이 전형’이란 비난을 받은 것도 다양성이 복잡성의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학력고사 시절 커트라인이 몇 점이라고 하던 시절의 기억으로 현행 입시를 바라볼 때 각종 수시 전형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성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복잡성이 입시 정보 격차를 가져오고 실제 입시 결과의 격차를 불러올 것이란 두려움으로 전환된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은 매우 필요하고 당위적 차원에서도 부정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현상적으로 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에는 이런 현실적 상황이 있다. 문제는 그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불만이 실재하는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이 투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교육에서 다양성이 심화되는 과정과 이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이나 후퇴가 이뤄진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 교육에서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교사로서 경험한 개인적 교육 생애사와 연관 지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처음 교직에 들어온 게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적이 있던 2002년이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립학교 교단에 서기 위해서는 임용고사라는 공개경쟁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당시만 해도 아직 인터넷 강의가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어서 노량진 고시 학원가에 가서 교육학과 전공 강의를 들으며 시험을 대비하였다. 몇 백 명을 좁은 강의실에 닭장처럼 몰아넣은 곳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였다. 강사는 설명을 하고 수강생들은 각자의 노트에 필기를 열심히 받아 적는 전형적인 고시 문화가 미래의 교사들을 키워내고 있었다.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을 뽑는 시험을 대비하는 곳이었지만, 여전히 20세기의 획일성이 교사 임용 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의 시작

당시 대한민국에는 IMF 외환위기의 충격파가 아직 남아 있었고 20세기를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계획되어 있었고 세계인의 축제가 예정되어 있던 그때 고등학교에는 새롭게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임용고사에는 당연히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는 구성주의 교육관과 자기주도학습,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 등이 강조되고 있었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가의 강의실 분위기와 새로운 교육 과정의 내용은 사실상 불일치했다.

다행히 시험을 통과하고 이듬해 3월 교단에 서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행운이 작용했던 것이 2001년에 김대중 정부가 발표한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이었다.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교육 현장에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만든 것이었다. 학창 시절 저학년 때는 2부제 수업을 하였고, 교실에서 60명 이상이 바글바글하던 기억이 생생하던 차에 오랜만에 돌아온 학교는 그렇게 변화를 시작하고 있었다. 덕분에 뽑아야 할 교사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버렸고, 후에도 두고두고 당시 임용고사 수험생들이 큰 덕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더 큰 변화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앞서 임용 준비하며 공부했다

고 언급한 7차 교육과정이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2학년과 3학년에서 운영하게 하였다. 당시만 해도 고등학교의 과목 선택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나 운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었다. 아직 콩나물 교실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던 때에 선택과목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냐는 반대가 많았다. 학급당 인원을 35명 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도 고등학교에 본격적으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것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과목에 따른 이동수업이 대폭 늘어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에서 다양성을 논함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 시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적어도 고등학교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교과목의 다양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은 제7차 교육과정 총론에서 사회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특별히 사회과를 예시로 삼은 것은 교과목의 종류가 급격히 늘어나서 선택형 교육과정의 도입을 실감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지리 교과에서는 <경제지리> 교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일반사회에서는 <법과 사회>, 역사에서는 <한국 근현대사>가 새로이 선택과목으로 등장하였다.

6차 교육과정까지도 제2외국어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과목 선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교과목의 다양화와 학생 선택이 본격적으로

표 1.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

구분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목	심화 선택과목
도덕 사회	도덕(2) 사회(10) 국사(4)	시민윤리(4) 인간사회와 환경(4)	윤리와 사상(4), 전통윤리(4), 한국지리(8), 세계지리(8), 경제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도입된 것은 7차 교육과정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 선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 단위 선택이었지 학생 개개인 단위의 선택은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선택형 교육과정 도입이 가져온 변화

교육과정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고등학교에는 여러 변화들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반 편성에서 나타났다.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반 편성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문과와 이과만 나뉘지면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하던 방식인 성적순 반 편성만 하면 되었다. 열 개 반이 있을 때 1등은 1반, 2등은 2반 순으로 가다가 10등을 10반에 배정하고, 다시 11등은 10반에 배정하여 역순으로 가는 방식이 고전적 반 편성 방식이었다.

학생의 반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이 비슷한 학생들을 같은 반으로 묶는 방식을 선택해야만 했다. 기존 반 편성에서 유일한 기준이었던 성적을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최대한 선택과목 중심으로 반을 편성하고, 그래도 같은 반 내에서 다른 선택 과목이 나오면 두 반이나 세 반씩 묶어서 이동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과거 학교에 등교하면 한 교실에 서 계속 수업을 듣던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이런 표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변화이다. 학교 관료제 사회에서 정량적 담임 평가로 작용했던 학급 성적이 유명무실해졌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담임교사가 학급 평균에 무지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을 갖고 있

을 것이다. 정량 평가가 불가능한 교직 사회에서 관료 조직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학급별 성적이었다. 꼴찌반 담임이 교장실에 불려갔다고 소문이 돌던 학교 내 전설이 그런 문화의 산물이었다.

더 이상 학급 성적은 학교의 관리자가 담임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게 된다. 출발점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서는 동등 비교가 불가능한 법인데, 선택과목별 반 편성이 이런 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가끔 변화된 교육과정을 이해 못한 관리자가 무리하게 반 평균에 따른 서열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으나, 구성원 스스로가 동의하지 못하는 기준이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웠다. 학교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던 획일적 평가 기준 하나가 근본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 대학 입시의 변화

교육 과정의 변화는 연쇄적으로 대학 입시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4학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제도적 변화였지만 기본적으로 총점으로 성적을 발표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출제 형식만 달랐을 뿐 성적 산출 방식만 놓고 보면 기존의 학력고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340점 만점에 대학교 학과별 커트라인이 총점으로 정해지는 방식이었던 학력고사와 유사하게 수능시험을 바라보고 제도를 받아들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7차 교육과정과 만나면서 시험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더 이상 거의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여 총점 기준으로 전국 단위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는 시험의 실시가 불가능해졌다. 학생 별로 배운 교과목이 다르니 획일화된 시험 자체를 실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과목을 선택하였으니 응시해야 하는 과목도 선택을 허용하는 체제가 대학입시에서 도입될 수밖에 없었다.

2002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부턴 순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고3이 되어 2004년에 치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이른바 원점수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고 백분위와 이에 따라 산출되는 표준점수, 그리고 등급만 표기되는 수능 성적표가 나왔다. 이때부터 선

택과목 간 유불리가 수험생들 선택과목 선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원래 의도는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택과목별 수험생들이 섞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을 상대평가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각 과목의 수험생 역량이 평균에 근접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가령 과학 탐구에서 물리와 생물을 선택한 학생들 간에 편차가 없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문제는 제도는 다양성을 전제하는데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획일화되면서, 본래 다양성이 추구하던 가치가 훼손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든 경제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사회탐구 영역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 보면 경제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마저 등급제에서 손해를 보게 될까 봐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 시험을 보고 경제학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꽤 많이 발견된다. 제도의 다양성이 선택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교육 제도나 입시 제도의 설계상의 문제로 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학 입시 유불리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가져온 폐해로 해석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문제 대처 능력 향상이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

키고 있다. 학생들의 점수가 향상되면서 변별을 위한 무리한 킬러 문항 출제가 남발되고 있다. 획일적 문제 풀이 훈련이 아니면 고득점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학력고사 시절부터 입학 시험을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었다. 점수에 연연하지 않게 기본적인 학력을 측정하자라는 취지일 것이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한국적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전국 단위의 통일된 시험을 치르기에 안성맞춤인 나라이다. 미국처럼 대륙을 횡단할 정도로 국토가 넓지 않고 전국이 표준시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표준화 시험을 치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과거 시험이라는 문화적 전통이 이런 표준화 시험에 대한 이해를 깊게 만들어주었다. 굳이 문제은행 식으로 여러 차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당락을 가르는 것이 효율적이고 승복하기도 쉽다. 실제로 수능 초기에 시험 기회를 여러 번 준다는 차원에서 동일 학년도에 두 차례 시험이 실시되기도 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었다. 다른 시기에 치러지는 시험의 난이도를 같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험 관리의 문제도 컸을 것이다.

참고로 문제은행 식 출제가 어려운 것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사교육의 존재 때문이다. 대학 입시에 특화된 사교육의 존재는 문제은행 식 출

제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문제 자체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서 점수를 높이는 방식이 일상화된 곳에서 문제은행에서 나온 시험문제는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자격시험에서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문제은행식 출제에 대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교육감 직선제가 가져온 교육 행정의 변화

교육의 다양화와 입시의 문제는 글의 말미에 한 번 더 점검하기로 하고 학교의 관료 문화와 다양성의 문제를 고찰해보기로 하자. 관료제는 다양성과 배치되는 조직 시스템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 흔히들 관료제는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에 적합한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관점에서 보면 1960년대 고도 성장기에 하나의 목표로 전 국민을 동원하고 매진하도록 하는 데에 관료제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교육 제도와 행정에서도 이와 다를 바 없었다. 이른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로 대표되는 획일적 교육 문화도 이런 사회 분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 1970년대 고등학교의 풍경을 담은 이 영화가 개봉된 것은 2004년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화되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과거의 획일적 교육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문화적 차원에서 지배적으로 공유되는 시기였다. 그러기에 20세기의 학교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는 영화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교 관료제 사회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나타났다.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를 담보할 교직 사회의 구조는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승진 시스템의 잔존과 함께 리더십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균열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에 지방 자치제도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 자치도 실시되고 있었다. 각 시도에 있는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교육 행정을 하도록 했지만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하였고, 교육감 선출도 간선제로서 변화를 가져오기에 매우 미흡하였다. 학교 운영위원 등이 참여하는 간선제는 각 시도 교육청에 자리 잡고 있는 관료제 라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른바 정치세력화한 지방 교육계 파벌이 돌아가면서 교육감을 한다는 비난이 쇄도하였다.

여기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온 것이 교육감 직선제였다. 일부에서는 교육이 정치에 종속된다 하여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는 하나, 교육계 내부의 권력 라인이 무너졌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였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무엇보다 교육감 구성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언론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것에 주목하였다. 정파적 관점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진보적 세력이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교육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회 변화에 토대를 뒤야 하는 것이 교육이기에, 교육 역시 사회변화만큼의 변화를

이뤄내야 할 당위성도 있다. 교육의 독자성이 있다 해도 그 자체로 사회 속에 존재하며 동시에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2009년 5월에 경기도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 출신의 김상곤 교수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이것은 교육 관료 사회에서 매우 큰 충격파를 주게 된다. 일선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곳에는 보수적 색채가 매우 강하게 드리워져 있었는데, 여기에 큰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약간 엇박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중앙정부의 경우 10년 동안의 진보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997년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처음 이뤄졌을 때, 교육에서 특별히 진보적 의제 설정이 강력하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교조를 합법화했지만 대북정책에서 햇볕정책과 같은 정도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서두에서 언급한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은 당시에 여러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지만,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학급 당 인원을 35명으로 줄이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이념 대립이 나타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추진 방식이나 정책 추진의 완급이 논란이 될 수 있었는데,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보면 부차적이다.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교육개혁의 큰 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

나는 '5·31 교육개혁안'에 바탕을 두었고, 이후 정부에서도 이 흐름을 거의 계승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교조 등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안이라고 비난했지만, 이후 정부도 이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뀐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책 기술 차원의 변화가 대부분이었고 교육이념적 차이에 따른 심오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의 등장은 많이 달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두발 자유화와 체벌 금지, 강제 야자 폐지 등 학생 생활의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은 교육 현장에서 상상하기 쉽지 않은 체벌이 10여 년 전만 해도 꽤 만연했다. 고등학교 생활은 아침 일찍 등교하여 저녁 10시 무렵까지 공부를 하다가 하교하는 문화가 일상이었다.

이런 천편일률적 학교 문화에 균열 지점을 만든 것이 교육감 직선제였던 것이다. 입시 제도와 교육과정 상에서만 논의되던 다양화가 학교 문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강제 야자는 학생들에게 학습 경험의 다양화를 제공하지 못하고, 두발 단속은 생활의 다양화를 막는 조치였다. 체벌은 이런 강제적 환경을 가능케 하는 단속 기제로 작동하였다. 이 모든 것이 교육감 직선제 하나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다. 기존 간선제 시스템에서 나온 관료형 교육감이었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변화의 장면이었다.

## 승진 경로의 다변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관료 사회에도 다양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승진의 통로가 마련되었다. 교사들의 승진에는 두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오랫동안 점수를 쌓아서 승진하는 시스템이다.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담임 몇 년, 부장 몇 년, 연구점수 몇 점, 농어촌 등 기피지역 근무 등의 점수를 더해서 정량화하여 성적순으로 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관료제 사회의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인데, 창의성과 유연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하나의 경로는 장학사이다. 임용고사처럼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서 장학사를 선발한다. 임용시험과 달리 승진 시험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시험이란 제도가 높은 차원의 능력을 검증하기엔 적합하지가 않다는 것에 있다.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뽑는 것에서는 일정 부분 지식의 양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리더로서 학교를 이끌어갈 사람을 선발할 때조차도 시험이란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인재 채용의 확실성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장 공모제가 활성화되고 장학사 선발에서도 평판 조사를 하거나 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오랫동안 승진을 준비해온 기존 시스

템 준비자들 입장에서는 파이를 나눠야 해서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새로운 인재 유형이 승진 라인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개인적 경험에서 평가하자면 그동안 승진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좀 더 다양한 인재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자리에 관료제적으로 상명하복에 충실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뜻이다. 물론 관료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만큼의 안정성이 담보되지만, 또 그만큼의 경직성과 창의적이지 못한 일처리를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교직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극렬한 저항도 있다. 이게 정치적 당파와 맞물리면서 큰 대립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보수적인 중앙정부와 진보적인 교육감의 동거는 이런 상황을 증폭시킨다.

현재 교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한 대립이 이런 연장선에 있다. 승진 점수를 쌓아 놓지 않은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는 시스템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한국교총 등 보수 교육계에서는 이를 무자격 교장이라고 명명하면서 반대하고 나선 것이고, 내부형 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육 관료의 다양한 충원이라는 관점에서 옹호하고 있다.

## 고등학교의 다양화

보수 교육계가 다양화 논리로 강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정책은 고교 다양화였다. 초·중등 교육에서 다양화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의 경계선을 두고 많은 논란이 야기된다. 만약 이 논란의 쟁점 부분이 이념적 차이와 연계되는 부분이면 논란은 증폭되고 대립은 격화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이주호 전 장관이 저술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책의 제목이 꽤 의미심장하다. 평준화가 다양화의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제목에서 나타내고, 이를 통해 평준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부침이 있긴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이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꽤 다양한 학교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 외국어고, 국제고, 영재고, 과학고 등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가진 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라는 선택지가 더해진다.

이런 다양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론은 정말로 고등학교가 다양화되었냐는 비판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외국어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한동안의 대진학생이 많다고 해서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에 맞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대학에 잘 보내기 위하여 우열만 가리듯이

우열 학교를 가리는 기능 이외에 더 무엇이 있느냐 것이 핵심적인 질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자사고가 교육과정 다양화 측면에서 비난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 모 고등학교는 의대 사관학교가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기도 하였다. 어떨 때는 이런 비아냥이 오히려 학교를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자연계에서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가야 할 코스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고교 다양화로 시작되었던 정책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다양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다. 한동안 외고 돌풍이 몰아치고 외고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사회문제화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어 인재가 그렇게 많을 리는 없고, 오직 대학 입시에 대한 유불리 차원에서 고등학교 선택이 좌우되면서 벌어진 문제인 것이다. 외국어가 좋아서 외고에 진학한다는 순진한 경로가 먹혀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능에서 선택과목 체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작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사회 구조가 다양성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의 순기능을 전제하고 시작한 다양화의 시도가 획일화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악순환의 되풀이다.

여기에 교육이 교육 자체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제도 한몫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특목고 선호 현상이 교육의 특수한 목적 자체가 아니라 입시 자체에

대한 성과에 집중되면서, 교육이 아닌 학생 선발에 치우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하나의 기준에서 우수한 학교와 열등한 학교를 나누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다양성을 훼손한다. 특목고는 스노브 효과(snob effect)와 선발 효과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적 가치도 실현하지 못하고 교육의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오직 입시 성과가 존재의 의의를 자가발전으로 만들어낼 뿐이다.

이런 상황은 애초에 달성하려던 다양화의 목적 자체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외국어 인재가 갈 수 있는 학교, 특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율형사립고 등의 존재는 필요한 법인데, 이를 부작용이 가려버리는 불상사를 낳는다.

다양화의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고등학교 체제가 자율형 공립고이다. 사립고에만 자율성을 주는 시스템이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으니 그에 맞는 공립 고등학교 체제로 도입된 것이 자율형 공립고이다.

선발효과 측면에서 보자면 꽤 성공적이었다. 우수한 교장 선생님을 내부형 공모제 형태로 모셔오고, 주위의 우수한 선생님을 초빙 형태로 채용한다. 공립학교에도 일반적인 인사 시스템으로 전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특별히 우수한 교사를 초빙해 오는 시스템이 있다. 이른바 초빙교사제도라 하는 것인데, 일반 고등학교보다 자율형 공립고에는 불러올 수 있는 초빙교

사 인원이 훨씬 많이 배정된다.

여기에도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정된 우수 자원의 교사가 자율형 공립고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노브 효과에 따른 선발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교육의 질적 경쟁이 아니라 포장재 경쟁이 공립 고등학교 내부로 연장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불만이 높은 이유

결국 한국 교육의 문제는 입시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 차게 도입되었던 입학사정관 전형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일으켰다.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하여 입학 사정에 활용하는 취지는 좋았는데, 새로운 획일화 압력에 직면했고 과열 양상을 보였다. 입학사정관에게 보여줄 자료라며 천편일률적인 자료가 무지막지하게 생성되었다. 자기의 실적을 보여주겠다면서 박스 한 상자 분량의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도 보였다. 그게 모두 학생의 역량을 나타내는 자료라면 좋으려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내 앞에서 어느 학생이 신문을 복사한 A4용지에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은 것을 목격한 일도 있다. 자신이 한 스크랩을 증명한다는 것이었다. 창의성 있는 인재를 구하려는 입시제도 앞에서 획일적인 대책으로 승부하려는 학생의 모습이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합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무한경쟁에 내몰린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이런 부작용을 겪은 끝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어 갔다. 부모 찬스를 이용하여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오는 등의 보여주기 식 학교 밖 스펙 경쟁이 무한대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 찬스가 심해진다며 세간의 불만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정착하면서 교사들의 업무량이 폭증하였다. 이런 면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종 전형에 대하여 약간의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대학의 반응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정부가 독려하니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부터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나름대로 각자 인재상에 맞는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제도로 학종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학종이 확대되던 시기에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도시 지역에 비하여 지역적 불편이 있는 곳이었는데, 입시에서 의외로 성과를 거두는 학생들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이 생각보다 좋은 대학에 곧잘 입학하는 것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나름 좋은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른 측면을 비판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른바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사실 단순한 잣대로 하기엔 그냥 수능 성적순이 깔끔하긴 하다. 수능 등급제나 백분위 점수보다 더 확실한 것은 과거 학력고사 시절의 총점 순이 될 것이다.

우열을 가리는 확실한 기준이 제시되면 제시될수록 획일화의 정도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잣대를 단일화한다는 의미

를 갖게 된다. ‘깜깜이’라는 말에는 복잡함이란 측면을 내포한다. 확실히 학력고사 시절에 비하여 복잡성이 더해지기는 했다. 필자만 해도 같은 대학의 과친구들은 대략 비슷한 점수대에서 모집되었다. 커트라인이 높건 낮건 간에 대충 해당 점수대의 학생들이 모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명확성 자체가 오늘날의 입시에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정시와 수시로만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수시 내에서도 여러 전형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논술전형이라고 하면 입시를 잘 몰라도 글쓰기로 대학을 간다는 상식 정도의 추정이 가능한데,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뽑는지 난감하게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복잡성이 다양화의 취지로 이해되지 않고 불공정성이라는 의미로 다가갈 때 제도에 대한 반작용이 심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우리 고등학교 교육은 또 한 차례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선택과정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전면화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실을 확충하고 있다. 사회과 교실, 과학실, 국어과 교실 등의 이름을 가진 교실들이 다수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지적 성장 과정을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인데, 7차 교육과정으로 처음 선택형 과정이 도입될 때처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 도입기보다 한결 나은 점이 있다면 저출생의 여파로 학급당

인원이 20명 대 초반으로 주저앉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에 무리하게 35명으로 줄인다고 비판을 받았던 것에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어김없이 반작용도 존재한다. 여전히 입시의 문제에 부딪힌다. 고교학점제와 조화롭기 어려운 수능 중심의 정시 체제를 확대하기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입시 제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수능 시스템이 크게 변화를 겪었는데, 고교학점제 시대에 수능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이공계 전공자들 중심으로 선택형 교육 체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은 편이다. 고등학교에서 쌓아서 와야 할 지식들을 제대로 축적하지 않고 들어오는 대학 신입생들이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절반의 진실만을 보여준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진학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다른 학생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공계 상위권에 갈 학생들에게 물리 과목이나 수학의 모든 영역에 대한 공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까지 필수화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각자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자기만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법인데, 이를 획일화로 해결하려 하면 할수록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 교육에서 다양성의 가치

교육에서 다양성이라 하면 결국은 다양한 학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른바 목소리가 큰 집단은 학벌에서 상위권 대학 출신일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모든 지식의 표준을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서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

이른바 인서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등급은 평균 2등급 이내다. 2등급은 상위 11% 이내를 가리키는데, 결코 절대 다수로서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나마 상위권 대학으로 한정하게 되면 상위 5% 이내의 극소수가 된다. 지식 자체가 인식의 끝을 지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구성된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표준화를 강제하는 기제가 된다. 다양성이란 그런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교육이란 분야에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선한 목적 자체가 그 실현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교육 정책에서 다양화의 시도는 여러 부작용과 반발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그런 반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양성 자체를 포기할 수도 없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국 교육은 조금씩이나마 변화해 왔으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교육에서 당위를 실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교육은 공공재인

동시에 개인의 신분 상승 수단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기제를 잘 다루면서 공공선을 이뤄나가야 할 책무가 교육 전문가와 참여자 모두에게 있다. 다양함을 위해 복잡성을 이해하고, 수준 높은 공정성을 위해 낮은 차원의 공정성을 발전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 서명원(Bernard SENÉCAL SJ)

가톨릭 예수회 신부. 1979년 예수회에 입회하여 1992년 사제 서품을 받았다. “퇴옹성철 선사의 생애와 전서”란 주제로 Paris 7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사)선도성찰나눔실천회(禪道會) 법사, (사)도전돌발공동체 이사장을 역임 중이며, 2016년 우수인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 전대원

위례한빛고등학교 교사. 경희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등을 가르쳐왔으며, 지은 책으로는 <고등어 사전>, <나의 권리를 말한다>, <세상을 보는 경제> 등이 있다.



## Diversitas

**권호** 7호  
**발행일** 2020년 12월 20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

